

크립토 시대의 구조적 권력과 패권의 소진

— 레이몽 아롱의 시각에서 본 수잔 스트레인지 구조적 권력론의 재검토 —

오태민 (한양대학교 비트코인화폐철학과 겸임교수)

초록

본 논문은 수잔 스트레인지의 구조적 권력론을 현대적 관점에서 평가한다. 수잔 스트레인지는 1980~90년대 미국 쇠퇴론의 허점을 동시대 누구보다 정확히 짚었다. 미국의 세계 GNP 비중 하락은 영토 중심적 권력관이 낳은 착시이며, 미국 권력의 원천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토지와 국민에서 세계체제의 구조에 대한 통제” 옮겨 갔다는 것이다. 이 진단은 2026년의 달러 쇠퇴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달러의 외환보유고 비중이 57%까지 낮아지는 동안, 규제도 의무도 없는 개인이 고르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비중은 약 99%였다. 국가 차원의 탈달러와 개인 차원의 달러화가 동시에 진행되며, 후자가 전자를 아래로부터 우회한다.

그러나 본 논문은 이 적중이 이론의 완전성이 아니라 한계를 드러낸다고 주장한다. 스트레인지가 1994년에 관대한 패권의 수혜자로 상정한 중국은 수정주의의 핵심이 되었고, 중국산 수입 경쟁이 미국에서 약 240만 개의 일자리를 앗아가고 무역 노출 지역의 양극화가 트럼프 현상으로 이어진 과정은 그의 이론이 제국을 유지하는 국내 정치적 비용을 담을 그릇을 갖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스트레인지가 그린 미국은 ‘공화국 없는 제국’이다. 본 논문은 레이몽 아롱의 포스(force)와 퓨상스(puissance) 구분으로 이 공백을 메운다. 이 틀에서 구조적 권력은 퓨상스와 다른 종류의 권력이 아니라 현실적 포스의 동원이 0에 수렴하는 퓨상스의 한쪽 극이며, ‘패권의 소진’이란 미국이 같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강제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어 다른 쪽 극으로 밀려가는 과정이다. 즉 수잔의 모형은 크립토 제도화를 하는 미국의 의도를 설명하는 데는 적합하나, 왜 미국이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레이몽 아롱의 제국적 공화국이라는 모순과 패권의 소진으로 스트레인지 모형을 보완해서 현재의 미국이 비트코인과 달러 스테이블코인 크립토를 제도화하는 동기와 의도를 설명하고자 한다.

I. 서론

국제정치경제학은 포스트-1945 질서가 직접적 강제가 아니라 구조적 권력, 곧 국가와 시장의 선택 가능성 자체를 규정하는 힘에 의해 재생산되어 왔다고 설명해 왔다. 수잔 스트레인지의 구조적 권력론이 그 대표적 형태다. 그에게 권력이란 승부를 이기는 힘이 아니라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힘이다. 달러가 세계의 거래·저축·준비 통화이고 연방준비제도의 금리가 세계의 신용 조건인 한, 미국은 매번 결정을 내리지 않아도 판이 자신에게 기울어 있는 권력을 누린다(Strange 1988). 이 모형의 힘은 쇠퇴론을 반박하는 대목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1994년 『국가와 시장』 제2판 결론에서 그는 미국 권력의 원천이 “토지와 국민에서 세계체제의 구조에 대한 통제로 넘어갔다”고 선언했다(Strange 1994; 국역본 382쪽). 30년이 지나 돌아보면 이 판단은 당시 쇠퇴론자들의 예측보다 훨씬 잘 버텼다. 일본의 추월도, 쌍둥이 적자에 의한 달러 체제의 붕괴도 오지 않았다.

2020년대의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같은 모형을 다시 입증하는 것처럼 보인다. 2025년 달러지수는 1973년 이후 최악의 상반기를 기록했고 달러의 외환보유고 비중은 2026년 1분기 57.13%로 낮아졌지만, 같은 시기 개인이 자유롭게 고르는 스테이블코인의 약 99%는 달러 표시였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스트레인지의 결론에는 쇠퇴론 비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미국 경제가 재건되면 이상주의가 부활할 것이며 중국을 포함한 세계는 “이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고 썼다(Strange 1994; 국역본 391쪽). 그 조건은 1990년대 후반 실현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관대한 관여가 낳은 것은 협력적 중국이 아니라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수정주의의 핵심으로서의 중국이었고, 그 중국에 대한 위기감은 미국 내부에서 이상주의를 몰아내고 트럼프 현상을 낳았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포용조차 대중국 견제의 궤적 위에 있다. 그의 모형은 달러의 지속을 설명하는 데 성공하지만, 그 달러를 지키기 위해 미국이 왜 이렇게까지 몰리게 되었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

여기서 하나의 구분이 필요하다. 구조적 중심성이 존재한다는 약한 명제와, 그 구조가 장기적으로 미국을 체계적으로 강화한다는 강한 명제는 다르다. 두 명제는 “로컬 국가는 코너에 몰리고 달러는 중심에 선다”는 동일한 관측을 예측하므로 그 관측만으로는 판별되지 않는다. 갈라지는 곳은 다른 데 있다. 중심국은 상황의 변화를 거의 언제나 주도하는 위치에 있는가, 아니면 변화에 몰려서 고삐를 다시 쥐기 위해 발버둥 쳐야하는가. 그 질서 안에서 동급의 도전자가 자라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비용을 떠안은 중심국의 시민은 언제까지 그 역할에 동의하는가.

본 논문은 스트레인지와 아롱을 대립시키기 보다는 결합한다. 스트레인지가 권력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설명한다면, 아롱의 포스와 퓨상스 구분은 그 권력이 어떤 대가로 유지되는지를 설명한다. 본 논문은 이를 각각 구조적 권력의 정역학과 패권 소진의 동역학이라 부른다. II장은 두 이론을 재구성해 ‘패권의 소진’을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III장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로컬 국가의 통화주권에 무엇을 하는지를 검토해 스트레인지의 구조권력 모형이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크립토의 제도화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걸 확인한다. IV장은 미국의 크립토 제도화와 채권자 주변부로서의 중국을 통해 중심국이 몰려 있음을 보인다. V장은 이론의 구조적 허점을, VI장은 종합과 예상 반론을 다루고, VII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II. 이론: 구조적 권력에서 패권의 소진으로

1. 구조적 권력

스트레인지는 권력을 관계적 권력과 구조적 권력으로 나누었다. 관계적 권력이 A가 B로 하여금 원래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하게 만드는 힘이라면, 구조적 권력은 그 승부가 벌어지는 판 자체를 정하는 힘이다. 구조적 권력을 가진 자는 상대를 강제할 필요가 없다. 상대가 스스로 그의 시스템 안으로 걸어 들어오기 때문이다(Strange 1988).

그는 이 권력이 네 기둥의 사면체라고 보았다. 안보구조는 누가 누구를 보호하는지를, 생산구조는 무엇을 누구의 기술로 만드는지를, 금융구조는 신용의 창출과 통화의 표준을, 지식구조는 무엇이 진실로 믿어지고 어떤 표준이 확산되는지를 결정한다. 네 구조는 서로를 떠받친다. 미국의 금융 권력은 홀로 서 있지 않다. 동맹을 묶는 안보구조, 반도체 설계와 플랫폼 표준을 쥐 지식구조, 공급망 상충부를 통제하는 생산구조가 함께 그것을 지탱한다. 이 관점에서 제조업 쇠퇴나 무역적자는 표면의 지표일 뿐이며, 중국이 대안 결제망을 세우더라도 사면체 전체를 한꺼번에 대체하기는 어렵다.

금융구조의 핵심은 신용을 창출하는 능력과 신용에 대한 접근 조건을 정하는 능력이며, 유로달러 시장이 그 역사적 사례다. 미국의 국내 규제가 달러 영업을 런던으로 밀어내면서 역외 달러시장은 1960년대에 폭발했다. 유로달러는 어느 중앙은행의 규제에도 걸리지 않았고 각국의 자본통제를 우회해 흘렀지만, 미국은 이를 진압하지 않았다. 베트남 전비 충당과 ‘위대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풀려나간 달러가 금태환을 청구하는 대신 역외에 머무는 편이 유리했기 때문이다. 신용이 어디로 흘렀는지를 보면 두 번째 명제가 드러난다. 오일쇼크로 쌓인 흑자 달러가 유로은행을 거쳐 중남미 정부로 흘러 들어가 대외채무가 1970년 약 290억 달러에서 1982년 약 3,270억 달러로 불어났고, 멕시코의 모라토리엄으로 위기가 터지자 주변부는 ‘잃어버린 10년’을 겪었으며 위기의 해법조차 미국이 주도하는 IMF의 조건부 프로그램을 통과해야 했다.

2. 미국 쇠퇴론 비판

스트레인지의 가장 강한 형태는 쇠퇴론을 반박하는 대목에 있다. 미국의 세계 GNP 비중은 전후 약 40%에서 22% 안팎으로, 세계 제조업 수출 비중은 약 30%에서 13% 안팎으로 떨어졌다. 스트레인지는 이 수치를 부정하지 않았다. 그가 부정한 것은 수치를 읽는 방식이었다(Strange 1994).

반박은 세 겹이다. 첫째, 쇠퇴론은 ‘메이드 인 USA’의 착시에 빠져 있다. 미국 영토 안에서 생산된 것만 세면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소유하고 지휘하는 생산이 빠진다. 권력은 영토가 아니라 소유와 통제로 측정해야 한다. 둘째, 그 편향을 걷어 내면 세계경제에서 미국의 권위는 “축소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증가했다”(국역본 384쪽). 셋째, 결정적으로 미국은 여전히 체제 전체에 비용을 떠넘길 수 있다. 적자를 내면서 달러를 평가절하해 달러 보유자 모두에게 비용을 부과한 것은 “미국의 우수한 구조적 권력으로만 가능”했고(국역본 387쪽), 1991년 걸프전 전비 약 610억 달러의 대부분을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일본·독일이 부담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읽혔다(국역본 388쪽).

여기서 두 수준의 명제를 분리해야 한다. **약한 명제**는 달러 중심 금융구조가 미국에 체계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고, **강한 명제**는 그 질서가 미국의 힘에 의해 미국의 힘을 위해 작동하는 장치라는 것이다. 스트레인지 자신은 구조적 권력이 반드시 의도된 설계는 아니라고 유보했지

만 약한 명제는 끝까지 견지했고, 후기에 이르러서도 “국가 일반은 덜 강력해졌지만 미국은 더 강력해졌다”는 판단을 유지했다(Strange 1998b).

따라서 본 논문의 비판은 강한 명제만을 겨누지 않는다. 구조적 권력이 중심의 권력을 유지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이론이 중심국의 유지비용 증가와 구조적 권력의 근간을 뒤흔들 도전자의 부상 앞에서 성립하는지를 묻는다.

3. 아롱의 포스와 퓨상스

레이몽 아롱은 국제정치의 권력을 물리적 강제력으로 환원하지 않았다(Aron 1962). 포스(force)는 한 정치단위가 보유한 군사적·경제적·정신적 수단이다. 퓨상스(puissance)는 “한 정치단위가 다른 단위들에게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는 능력”이다. 포스가 수단이라면 퓨상스는 그 수단을 특정 상황에서 작동시켜 얻는 결과다.

세가지를 고려해야한다. 첫째, 포스와 퓨상스는 비례하지 않는다. NATO 안에서 미국은 프랑스에 비해 압도적 포스를 가졌으나 그 격차가 그대로 퓨상스로 전환되지는 않았다. 둘째, 퓨상스는 강제뿐 아니라 설득을 통해서도 행사되며, 이때 포스는 동원되지 않은 채 배경에서 작동한다. 셋째, 아롱은 퓨상스를 결정하는 요소로 공간, 자원, 그리고 집단적 행동 능력을 들었다. 퓨상스는 자원의 양만이 아니라 그것을 조직하고 정당화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

‘퓨상스=매력, 포스=강압’이라는 통속적 대비와 다르다. 매력과 강압의 대비는 오히려 나이(Nye 2004)의 소프트파워-하드파워 구분에 가깝다. 아롱에게 포스는 강압 자체가 아니라 수단이며, 퓨상스는 매력이 아니라 의지를 관철하는 관계적 결과다. 아롱의 틀에서 패권의 건강을 묻는 올바른 질문은 “미국이 얼마나 많은 포스를 가졌는가”가 아니라 “미국은 포스를 얼마나 적게 동원하고자 얼마나 많은 퓨상스를 얻는가”이다.

아롱은 『제국적 공화국』(Aron 1973)에서 이 틀을 미국에 적용했다. 제목의 두 단어가 모두 무게를 갖는다. 미국은 세계질서를 떠받치는 제국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동시에 시민의 동의와 선거로 움직이는 공화국이다. 제국의 비용은 결국 공화국의 시민이 치르며, 시민이 그 비용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을 때 제국적 역할은 미국 국내 여론의 거부 때문에 흔들린다.

4. 스트레인지의 구조적 권력은 아롱 퓨상스의 한 쪽 극이다

두 개념은 상당 부분 겹친다. 둘 다 권력을 자원의 양으로 환원하기를 거부하고, 둘 다 권력을 관계로 파악하며, 무엇보다 둘 다 강제 없는 순응을 권력의 정상적 형태로 본다. 스트레인지의 구조 안에서 참가자는 강요당해서가 아니라 그 판에서 활동하는 편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규칙을 따른다. 달러로 계약하는 기업은 미국의 의지를 따른다고 느끼지 않는다. 아롱의 언어로 이것은 포스가 동원되지 않은 채 배경에 머무는 상태, 곧 설득조차 필요 없는 자발적 수용에 의한 퓨상스다.

여기서 본 논문의 핵심 번역이 나온다. 스트레인지의 구조적 권력은 아롱의 퓨상스와 다른 종류의 권력이 아니라 퓨상스 스펙트럼의 한쪽 극한이다. 즉 포스 동원이 0에 수렴하는데도 타자의 선택이 체계적으로 중심국에 유리하게 정렬되는 상태다. 반대쪽 극한에는 제재와 관세처럼 강압적인 수단 즉 포스를 동원해야 얻어지는 퓨상스가 있다. ‘패권의 소진’이란 같은 중심적 지위를 유지하는 지점이 스트레인지의 극에서 강제의 극 쪽으로 밀려가는 과정이다. 이는 절대적 힘의 쇠퇴가 아니

라, 동일한 우위를 유지하는 데 드는 강제적 개입과 비용의 증가를 뜻한다. 본 논문은 이를 세 차원으로 조작화한다.

표 1. ‘패권의 소진’의 세 차원과 관측 지표

차원	아룡의 개념적 근거	관측 지표(예시)
동원 비율의 상승	잠재적 포스 → 현실적 포스	제재 지정 건수, 수출통제 품목, 관세·방위비 협상에서의 명시적 위협
전환 효율의 하락	포스와 류상스의 비비례성	동원된 포스 대비 상대의 순응 정도, 제재 이후 대안 결제망·금보유의 증가
행사 양식의 이동	선택에 의한 류상스 → 강제에 의한 류상스	동맹에 대한 비용 청구, 투자 약정의 강요, 상대의 방어적 류상스 증가

스트레인지와 아룡의 개념이 갈라지는 지점도 있다. 스트레인지에게 권력은 구조에서의 위치에 깃들며 관성을 통해 스스로를 재생산하지만, 아룡에게 류상스는 관계와 상황에 깃들며 매번 실현되어야 한다. 류상스는 사용할 때마다 줄어드는 유량의 개념이다. 본문에서 다루게 될 ‘달려무기화의 역설’(McDowell 2023; Farrell and Newman 2019)은 동원된 포스가 상대의 인식을 바꾸어 류상스를 갉아먹기 때문에 발생한다. 스트레인지의 구조적 권력은 권력의 유지비용이 점점 비싸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친다. 본 논문이 하려는 일은 구조적 권력의 대차대조표에 류상스의 손익계산서를 붙이는 것이다. 그리고 스트레인지의 사면체에는 안보·생산·금융·지식이 있을 뿐 이를 떠받칠 미국의 국내적 동의라는 항목이 없다. V장에서 논증하듯 이 공백이 ‘공화국 없는 제국’의 자리다.

III. 크립토와 통화주권: 50 년을 뛰어넘은 스트레인지 모형

1. 스트레인지가 주목한 금융에 대한 국가 권력의 통제력 상실

달러 스테이블코인 자체는 스트레인지가 예측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다. 근간 기술인 블록체인 자체가 그가 가고 없는 시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 이와 비슷한 현상은 그의 시대에도 있었다. 『국가의 퇴각』(1996)의 첫 문장은 이렇다. “오늘날 정부 수반들은 자신과 각료들이 과거에 가졌던 국내 사회와 경제에 대한 권위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가장 늦게 깨닫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인다”(Strange 1996: 3). 이 상실을 설명하기 위해 「방치된 요인—기술과 금융」을 제시했다. 국가 권위의 쇠퇴를 설명하는 두 축 가운데 하나가 금융이다.

같은 장에서 그가 꼽은 국가의 환원 불가능한 책무 넷 가운데 화폐는 안보 바로 다음이다. “시민적 법과 질서의 유지, 외부 침략자의 약탈로부터 영토를 방어하는 것, 경제에 건전한 화폐를 보장하는 것, 그리고 재산의 기본적 교환에 관한 명확한 규칙을 보장하는 것.” 근대국가를 근대국가가게 하는 최소 목록 안에 통화관리가 들어 있다. 그런데 제3장 「정치의 한계」에서 그는 이 기능에 대한 국가의 배타적 권력을 해부한다. 그는 화폐 발행 독점에서 나오는 이익을 가리키는 ‘시노리지(seigniorage)’라는 단어가 “배타적이고 우월한 권위에 대한 국가의 주장”을 반영한다고 지적한 뒤, 곧바로 그 배타성을 허문다. 스코틀랜드의 은행들은 자기 은행권을 발행하고 있다. 같은 해 런던정경대 강연에서 그는 더 직설적으로 말했다. “가치를 배분할 권위를 가진 것은 국가만이 아니다. 통화회사도 가지고 있고, 마피아도 가지고 있다”(Strange 1995).

그렇다면 그 시대에 로컬 국가의 통화관리 능력을 침식한 주체는 누구였는가. 답은 세 갈래다. 첫째는 역외시장이다. 그는 침식의 기원을 “1960년대 유로달러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금융시장의 자유화”에서 찾았고, “금융의 세계화는 국가 규제 체계에 큰 구멍을 뚫었다”고 요약했다 (Strange 1998b: 16). 둘째는 미국의 규제 선택이다. 그에게 침식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결정이었다. “탈규제를 택한 것은 국가들의 정부, 특히 미국 정부였다”(Strange 1998b: 18). 셋째는 국제기구다. 1997~98년 아시아 위기에 대해 그는 “아시아의 유일한 공통점은 너무 빨리 자유화하라는 외부 압력이라는 치명적 조합이었다”고 적었고, 그 ‘외부’를 미국과 IMF와 G10으로 명시했다 (Strange 1998b: 25, 18).

세 경로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모두 허가받은 중개기관을 통과한다는 것이다. 유로달러는 런던의 은행 장부에 적혔고 IMF 프로그램은 재무부와 중앙은행을 상대로 협상되었다. 침식의 주체는 시장이었지만 그 시장의 참여자는 국가가 면허를 내준 법인이었다. 이 부분이 바로 달러 스테이블코인 현상의 특이성이 확인되는 지점이다.

2. 불가능 삼각형과 닫을 수 없게 된 꼭짓점

1) 이론적 전제의 붕괴: 자본통제의 게이트웨이 상실

먼델-플레밍의 불가능 삼각형에 따르면, 어떤 통화당국도 환율 안정, 독립적 통화정책, 그리고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 세 가지 정책 목표 중 어느 두 가지만 선택할 수 있으며, 나머지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 20세기의 국민국가들이 이 냉혹한 경제적 제약 속에서 자국 경제의 필요에 따라 정책 조합을 선택할 수 있었던 핵심 수단은 '자본통제(Capital Controls)'였다.

자본계정을 법적으로 닫아걸면, 국가 안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자금의 흐름을 제한함으로써 환율을 관리하는 동시에 독자적인 금리 정책(독립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자본통제가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절대적인 제도적 전제가 필요했다. 바로 국경을 넘나드는 모든 자금이 국가가 면허를 내준 '은행'이라는 단일한 금융 관문(Gateway)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외환 송금은 은행 장부에 기록되었고, 은행은 국가의 규제와 명령을 집행하는 최전선 대리인이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바로 이 전제의 기초를 허물어뜨린다.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계좌도, 국경의 허가도, 중앙의 청산소도 거치지 않고 블록체인 위에서 스마트폰 지갑에서 지갑으로 직접 이전된다. 개인과 기업이 자국 통화를 던지고 달러 표시 토큰을 보유·결제하는 순간, 국가가 법적으로 걸어 잠근 자본계정은 아래로부터 무력화된다. 국가는 여전히 은행이라는 낡은 문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으나, 실제 돈은 그 문을 완전히 우회해 흐른다.

이 점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결제 수단의 혁신이 아니다. 그것은 불가능 삼각형에서 국가가 선택할 수 있었던 조건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경시킨다. 전통적으로 '자본이동의 자유'는 국가가 필요에 따라 열고 닫을 수 있는 정책 변수였다. 그러나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자본이동을 물리적·행정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워질수록, 자본이동의 자유는 국가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외부적 조건(Given condition)에 가까워진다.

2) 정책 공간의 축소와 '디지털 은밀한 달러화'의 실증적 근거

꼭짓점이 닫히지 않게 될 때 통화당국의 정책 공간은 급격히 좁아진다. 예를 들어, 통화당국이 수출 경쟁력을 높이거나 국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자국 통화의 약세를 유도하려 한다고 가정해 보자.

전통적 자본통제 하에서는 자금의 해외 이탈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어 일정한 정책적 재량이 보장되었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이 개인의 지갑까지 깊숙이 침투한 환경에서는, 자국 통화 약세 기대가 곧바로 '달러 토큰으로의 대피'를 촉진한다. 이 자본 이탈은 자국 통화의 절하 압력을 가속화하고, 수입물가를 폭등시켜 인플레이션을 증폭시키며, 증폭된 인플레이션은 다시 더 강력한 달러 도피를 부추기는 악순환의 나선을 만든다.

이 파국적 순환을 차단하려면 디지털 자산의 거래와 인터넷 접근 자체를 전면적으로 통제해야 하지만, 그러한 조치는 디지털 경제 전체를 봉쇄하는 천문학적인 경제적 비용을 수반한다. 결과적으로 통화당국은 자본이동을 완전히 막기보다, 환율을 방어하거나 금리를 미국의 통화정책에 종속시키는 쪽으로 백기를 들 수밖에 없다.

이 이론적 메커니즘은 최근 발표된 몇 가지 핵심 실증 문헌들을 통해 강력한 뒷받침을 얻고 있다.

① 자본통제의 효과성 분할 (Hofmann, Mehrotra, and Paulick 2026)

Hofmann과 동료 연구진은 예금 달러화(Traditional Deposit Dollarisation)와 스테이블코인 유입을 동일한 계량적 틀에 넣고 비교 분석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전통적인 자본이동 제한 조치는 예금 형태의 달러화를 29~32%포인트 낮추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 유입에 대해서는 기존의 자본통제 규제 체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저자들의 진단은 명쾌하다. 스테이블코인은 국가의 규제 경계 바깥에 존재하는 '무허가형 블록체인(Permissionless Blockchain)'에서 유통되기 때문이다. 이는 자본통제 자체가 소멸한 것이 아니라, 자본통제가 구속할 수 있는 금융 흐름의 영역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국가 통제 바깥에서 작동하는 새로운 달러화 채널이 확장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증명한다.

② 환율 괴리와 자국 통화 절하 (Aldasoro, Beltrán, and Grinberg 2026)

Aldasoro 연구진은 4종의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과 27개 법정통화의 2021~2025년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스테이블코인 순유입의 거시경제적 인과효과를 추정했다.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순유입이 외생적으로 1% 증가할 때, 스테이블코인 환율과 공식 현물환율 사이의 괴리가 약 40베이스포인트(bp) 확대되고 자국 통화의 절하가 촉발된다. 이 충격은 금융시장 인프라가 취약하고 차익거래가 원활하지 않은 신흥시장 통화에서 가장 파괴적으로 나타났다.

③ 스텔스 달러화의 현장 (BIS 2026 / 2022)

국제결제은행(BIS)은 이러한 현상을 '디지털 스텔스 달러화(digital stealth dollarisation)'로 명명하고, 24시간 가동되며 자본통제를 우회하는 이 채널의 파괴력을 경고했다. 그 전조는 이미 2021년 터키 리라화 위기에서 선명하게 포착된 바 있다. 터키 리라의 스테이블코인 거래 비중은 2021년 7월 11%에서 불과 5개월 만인 12월 26%로 폭등했다. 반면 같은 시기 통상적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 리라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0.5%에 불과했다. 통화가 취약한 국가에서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전통 외환시장을 수십 배 초과하는 '리라 집약적 달러 도피처'로 작동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다.

3) 정책적 대응의 비대칭성과 논증의 한계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주체들의 태도는 국가별 역량에 따라 극단적으로 갈린다. 유럽 연합(EU)은 '암호자산시장법(MiCA)'을 통해 역외 통화 표시 토큰에 강력한 규제 장벽을 세우며 이를 명백한 '통화질서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방어에 나섰다. 반면,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달러화 압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다수의 신흥국들은 새로운 통화 채널을 통제할 기술적·행정적 역량이 부족해 이를 제도적 통화주권의 문제로 편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BIS의 조정 추계에 따르면, 블록체인 상의 총 원계열 거래액 중 실제 실물경제 결제 및 자본 이동과 관련된 조정 후 금액은 약 1% 안팎에 불과하며, 순수 결제 용도의 스테이블코인 거래는 세계 총 결제액의 0.02% 수준에 머문다. 절대적 거시 규모만 보면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법정 화폐 질서를 완전히 대체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불가능 삼각형의 논리에서 결정적인 것은 평균적 거래량의 크기가 아니다. 자본통제는 자금이 국가의 관리 관문을 통과한다는 전제에서 작동하므로, 핵심은 우회 채널의 전체 비중이 아니라 '국가가 집행 불가능한 우회 관문이 존재하며 그것이 확장 가능하다' 하는 점이다. 관문이 단 하나라도 열려 있다면, 그 통행량의 대소와 무관하게 자본계정은 원리적으로 닫힌 것이 아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가져올 거시금융 질서의 변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3. 달러 지배의 계단과 가시성의 이동

이 메커니즘에는 하나의 경험적 비대칭이 겹친다. 선택 주체별로 달러의 비중을 늘어놓으면 가파른 계단이 나타난다.

표 2. 선택 주체별 달러 비중

순위	선택 주체	달러 비중	자료
실물경제	세계 생산	약 26%	IMF 세계경제전망(명목 GDP 기준)
공식 준비금	각국 중앙은행	57.13%(2026년 1분기)	IMF COFER
외환시장	금융기관·기업	89.2%(2025년 4월, 거래 한쪽 기준)	BIS 3년 주기 서베이
스테이블코인	개인·시장 참여자	약 99%	시가총액 기준 업계 집계

미국의 세계 GDP 비중은 약 4분의 1이지만, 중앙은행이 외환보유고를 배분할 때 달러 비중은 57%로 오르고, 외환거래에서는 89.2%에 달러가 한쪽으로 참여하며, 개인이 자유롭게 고를 때 달러 표시 비중은 사실상 전부에 이른다. 다변화 의무와 지정학을 의식하는 정책 엘리트의 선택은 60%를 넘지 못하지만, 규제도 의무도 없는 개인이 자기 자산을 지키려 선택할 때 그 선택은 거의 만장일치로 달러로 수렴한다. 슈나벨의 표현대로 “오늘날 유통되는 사실상 모든 스테이블코인이 달러 표시이며, 다른 통화는 무시할 만한 역할만 한다”(Schnabel 2026). 이 계단은 스트레인지의 명제를 강하게 지지한다. 달러 지배의 저수지는 중앙은행의 장부만이 아니라 시민 개개인의 자발적 선호이며, 로컬 정부의 탈달러 의지는 그 국민의 지갑에서 우회된다. 아룡의 언어로 이것은 포스를 동원하지 않고 얻는 퓨상스, 곧 퓨상스에서 ‘스트레인지의 극’에 가장 가까운 지점이며, 패권 소진 테제에 가장 불리한 증거이기도 하다.

스테이블코인이 로컬 국가에서 앓아가는 것은 통화정책만이 아니다. 가시성도 함께 앓아간다. 전통적 금융거래는 은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민국가는 거래정보를 확보하고 조세·외환·자금세탁 규제를 적용할 수 있었지만, 은행을 지나지 않는 달러 토큰의 이동은 그 어느 망에도 잡히지 않는다. 그러나 가시성은 사라지지 않고 이동한다. 공개 블록체인 위의 토큰은 미국의 규제와 법집행 요청에 응하는 중앙화 발행자가 찍은 채무증서이고, 발행자는 보유자가 어느 나라에 있든 그 나라 정부의 승인 없이 특정 주소의 토큰을 동결할 수 있다. 테더는 2025년 한 해에만 약 12억 6천만 달러어치의 USDT를 동결했고 상당 부분이 미국 당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공개 원장의 영구성은 온체인 분석기업의 손에서 주소를 실명 주체로 번역하는 ‘가독성 기계’가 된다. 로컬 국가의 규제 가시성이 약해지는 동안 워싱턴의 잠재적 가시성은 오히려 넓어진다.

이 가시성의 이동이 가장 극적으로 전개될 무대는 인도다. 전통적 발전 경로에서 한 사회는 현금 경제에서 은행 계좌로, 다시 신용카드와 전자결제로 단계를 밟아 이행한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보급과 모바일 혁명은 이 중간 단계를 통째로 건너뛰는 도약(leapfrogging)을 가능하게 한다. 은행 지점망과 카드 인프라가 충분히 깔리기도 전에, 광범위한 현금경제가 곧바로 스마트폰 지갑 속의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인도가 이미 세계 최대의 크립토 채택국이며(Chainalysis 2025, 3년 연속 1위) 그 채택의 중심이 비트코인이 아니라 달러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사실은, 이 경로가 사변적 가설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현실임을 시사한다.

여기에 앞서 제시한 가시성 이동의 논리가 정확히 겹치면서 하나의 역설이 발생한다. 인도 정부는 2016년의 전격적 화폐개혁(demonetization)에서 드러나듯, 거대한 비공식 현금경제를 공식 장부 위로 끌어올려 ‘보이게’ 만드는 것을 오랜 정책 목표로 삼아 왔다(Shepard 2016; Lahiri 2020). 그런데 그 목표가 루피 기반의 공식 결제망이 아니라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실현된다면, 현금 은 사라지고 거래는 투명해지되 그 투명성은 인도 정부의 장부가 아니라 미국 관할권 아래의 중앙

화 발행자와 글로벌 플랫폼의 장부 위에 축적된다. 인도 정부가 그토록 원했던 바로 그 가시성이, 정작 인도 정부가 아니라 미국이 통제하는 인프라에 의해 확보되는 것이다.

이 전도(顛倒)는 추상에 머물지 않는다. 가령 인도의 기업인이 자국 정치인에게 건넨 뇌물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오갔다고 하자. 그 거래의 흐름을 추적하고 특정 주소를 동결하려 할 때, 인도의 수사당국은 자국 은행이나 자국 법원이 아니라 미국 혹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사실상 수사 협조를 ‘요청’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자국민 사이의, 자국 영토에서 벌어진 부패를 수사하는 권한의 일부가 외국 관할의 민간 발행자에게로 이전되는 것이다. 수사권이라는 국가의 핵심 권한이 시장과 기술에 의해서 크게 제약된다. 이것이야말로 스트레인지가 유로달러와 국제금융의 탈국경화를 관찰하며 예견한 바 — 로컬 국가의 주권이 시장으로 넘어가고, 그 시장의 배후에는 시장을 규율하는 특정 관할권이 없다는 명제 — 가 디지털 통화의 층위에서 다시 한번, 그리고 더 극단적인 형태로 구현되는 장면이다. 유로달러가 국가의 자본통제를 우회하며 금융에 대한 국가 권력을 잠식했듯이, 스테이블코인은 국가의 결제·수사 가시성을 우회하며 그 권력을 발행자의 관할권으로 이전한다.

4. 50년 후, 모형이 맞은 것은 이론의 한계를 드러낸다

그렇다면 2026년의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그의 모형에 무엇을 더하는가. 셋을 짚을 수 있는데, 둘은 새롭고 하나는 전혀 새롭지 않다. 첫째, 침식의 주체가 도매에서 소매로 내려왔다. 그가 특정한 세 경로는 모두 면허받은 중개기관을 통과했지만 스테이블코인의 경로에는 그런 법인이 없다. 그의 1971년 통화 유형론에서 ‘최상위 통화(top currency)’는 보유의 경제적 유인이 압도적이어서 자발적으로 채택되는 통화였지만(Strange 1971), 그 채택의 주체는 국가와 기업과 은행이었다. 소매 규모의 국경 간 통화대체는 그의 시대에 기술적으로 불가능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시대에 침식의 행위자는 이제 은행가가 아니라 라고스의 상인이고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저축자다.

둘째, 그가 반증 사례로 들었던 것이 규칙이 되었다. 스코틀랜드 은행권은 배타성 주장을 찌르기 위한 각주에 가까웠다. 2026년에는 국가가 아닌 발행자가, 자기 국가의 통화도 아닌 통화를, 수십 개 관할권에 걸쳐 유통시킨다. 예외로 제시된 것이 구조가 되고 있다.

셋째, 그러나 흐름의 방향은 조금도 새롭지 않다. 『국가와 시장』의 논지는 국가 일반이 시장에 밀린다는 것이 아니었다. 국가가 시장에 밀리는 바로 그 과정이 시장의 구조를 쥔 나라에게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었다. 유로달러가 그 원형이다. 각국의 통제가 약해질수록 달러의 중심성은 오히려 강해졌다. 그는 후기에 이르러서도 이 비대칭을 명시했다. “국가 일반은 덜 강력해졌지만 미국은 더 강력해졌다”(Strange 1998b). 1989년에 미국을 영토 없이 구조로 지배하는 ‘초국적 제국’으로 개념화한 것도 같은 판단이다(Strange 1989). 국가의 퇴각에서 미국은 예외라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의 유통은 로컬 국가의 기반을 파먹는 데 그치지 않고, 매우 정교한 자본의 회수 메커니즘을 작동시킨다. 도쿄, 서울, 상하이 혹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개인이 자국 통화를 던지고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구매할 때, 그 과정은 다음과 같은 지정학적 연쇄를 낳는다.

- 1) 로컬 상업은행(예: 한국, 일본, 중국의 시중은행)에 예치되어 있던 자국 통화 예금과 유동성이 이탈한다.
- 2) 이 과정에서 로컬 상업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던 자국 국채나 본국 통화 기반의 자산 수요가 위축되고, 로컬 통화의 가치는 절하 압력을 받는다.

- 3) 반면,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예: 테더, 서클 등)는 그 대가로 유입된 법정 달러를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유동성이 풍부한 미국의 단기 국채(T-bills)로 대거 매입하여 준비금으로 적립한다.

그 결과, 2026년 중반 기준으로 달러 담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가 보유한 미국 단기국채는 약 2,200억 달러를 상회하며, 일부 주요 외국인 투자자(예: 독일이나 걸프 국가들) 및 미국 내 거대 머니마켓펀드(MMF)의 보유 규모를 정면으로 넘어섰다(Ahmed and Aldasoro 2026; BIS 2026).

스트레인지의 금융 구조에서 나오는 권력의 핵심을 “일하지도 않고 거래하지도 않고 구매력을 획득하는 것”으로 규정했다(Strange 1987: 565; 1994: 28). 스테이블코인은 이 특권을 둘로 쪼갬다. 발행자는 준비금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을 가져가고, 미국은 그 자금의 최종 귀속처로서 자국 부채(국채)에 대한 거대하고 가격 비탄력적인 수요를 가져간다.

터키와 아르헨티나와 인도와 한국과 일본이 민간의 디지털 자발적 달러화 과정에서 통화주권의 일부를 털어 내고 로컬 은행의 자금줄이 마르는 동안, 미국은 털어 내지 않는다. 그것이 달러이기 때문이며, 미국이 전 세계 디지털 자산의 기축 통로를 자국 관할권 안으로 틀어쥐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권력은 점점 더 시장과 공유되고 있으며, 그 시장은 결국 한 나라(미국)의 국채를 담보로 삼는다.

그리고 이 결합은 그 자신의 구조적 권력 정의에 가장 충실한 사례다. 구조적 권력이란 “다른 이들에게 직접 압력을 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열린 선택의 범위를 바꾸는” 능력인데(Strange 1988: 31), 워싱턴은 어떤 나라에도 달러를 쓰라고 요구하지 않으며 요구가 없으므로 저항할 대상도 없다. 1994년의 착시가 ‘메이드 인 USA’ 장비였다면 2026년의 착시는 ‘탈중앙화된 무허가형 블록체인’이지만, 그 착시를 걷어 낸 자리에서 그의 통찰은 여전히 옳다.

여기에 이 논문의 물음이 있다. 반세기 전에 만들어진 모형이, 그때는 존재하지도 않던 기술 위에서 다시 정확히 들어맞는다는 사실은 무엇을 뜻하는가. 통상의 답은 이론의 승리다. 본 논문의 답은 다르다. 모형이 예측하는 관측—로컬 국가는 코너에 몰리고 달러는 중심에 선다—은 매우 다른 두 세계에서 똑같이 나타난다. 하나는 구조가 스스로를 재생산하는 주도권을 쥔 중심국의 세계이고, 다른 하나는 그 중심성을 유지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것을 동원해야 하는 환경 변화 때문에 스스로 궁지에 몰린 중심국의 세계다. 스트레인지의 모형에는 이 둘을 가르는 변수가 없다.

스트레인지가 미국의 구조적 권력이 강화된다고 진단한 시기, 미국은 자신이 만들지도 않은 기술을 행정명령과 입법으로 흡수하고, 자신이 세운 자금세탁방지 공공재의 누수를 감수하며, 자국 부채를 소화할 소매 수요를 찾아 나서고, 동맹에게 청구서를 보낸다. 스트레인지의 모형은 이 모든 것을 한 줄로 기록한다. ‘미국의 구조적 권력은 여전히 있다.’

IV. 크립토 제도화와 금지에 몰린 미국

1. 크립토 포용은 대중국 응전이다

미국의 크립토 정책은 지연에서 적극적 포섭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전환을 특정 정권의 취향으로 보기 어렵다. 2023년 6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소위원회의 청문회에 실마리가 있다. 「달러 지배력: 세계 기축통화로서 미국 달러 지위의 보전」이라는 제목의 이 청문회는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초당적으로 열렸고, 문제의식은 탈달러 압력에 맞서 달러 패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였다. 한 의원은 중국이 CBDC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발행하는 디지털 달러보다 민간이 발행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장려하는 규제 틀이 더 낫지 않은지 물었고, 증인은 중국의 CBDC를 감시 도구로 규정하며 준비금을 100% 보유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이미 존재한다고 답했다.

이 구도는 2025년 1월 23일 행정명령 14178호에서 국가 정책이 되었다. 행정명령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성장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달러의 주권을 보호하라고 명령하는 동시에, 연방기관이 CBDC를 수립·발행·홍보하는 것을 금지했다. 국가가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는 중국의 모델이고, 민간이 발행하되 미국의 규칙 아래 놓인 달러 토큰은 미국의 모델이라는 대비가 정책의 골격을 이룬다. 2025년 7월 서명된 GENIUS법은 이 흐름을 명시화 했다. 상원 68 대 30, 하원 308 대 122의 초당적 표결이었다는 점은 이것이 특정 정권의 성향이 아니라 워싱턴 전체의 대중국 인식이 크립토 정책으로 번역된 결과임을 보여 준다.

중국의 대응은 미국과 대조적이다. 중국은 2021년 크립토 채굴과 거래를 전면 금지했고 디지털 위안화를 국가 주도로 확산시켰으며, 2026년 2월에는 승인받지 않은 역외 위안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까지 금지했다. 한쪽은 민간 토큰을 풀어 달러를 세계 개인의 지갑까지 밀어 넣고, 다른 쪽은 국가주도 디지털 화폐를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통제의 벽을 더 높이려고 한다.

크립토는 미국이 만든 것이 아니다. 비트코인은 2008년 익명의 백서에서 나왔고, 미국이 탈달러에 맞서 활용하는 도구조차 미국 바깥에서 등장한 외생적 기술이다. 미국이 달랐던 점은 그 탈국 경성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쓸 수 있음을 비교적 일찍 깨달았다는 데 있지만, 이것은 설계된 전략이 아니라 뒤늦게 붙잡은 기회다. 스트레인지의 세계에서 미국은 구조를 통해 조용히 이득을 얻는 제국이었다. 경쟁자의 국가 디지털 화폐에 맞서기 위해 자신이 만들지도 않은 기술을 흡수하고 그것을 행정명령과 입법으로 국가전략화해야 하는 현실은 그의 모델에서는 예상밖이다.

2. 부채와 자기 모순

둘째 동기는 재정이다. 미국 의회예산처의 2026년 2월 전망에 따르면 2026회계연도 연방 재정 적자는 1조 9,000억 달러(GDP 대비 5.8%), 순이자 지출은 1조 달러에 이르며, CBO 스스로 “재정 경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명시했다. GENIUS법이 발행자에게 단기 국채 중심의 준비금을 요구하는 순간, 스테이블코인의 성장은 미 국채 수요 증가로 연결된다. 라고스의 상인이 나이라를 USDT로 바꾸면 발행자는 그 상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 국채를 사들인다. 테더는 2026년 3월 말 기준 미 국채에 1,410억 달러의 직·간접 익스포저를 보유해 국제자본수지 기준 세계 17위 수준의 보유 주체가 되었다.

일부 연구자가 스테이블코인을 ‘온체인으로 이식된 유로달러’로 부르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 명명은 역사적 아이러니를 품는다. II장에서 본 20세기 유로달러는 주변부를 채무자로 만들

고 위기의 비용을 주변부에 집중시킴으로써 중심국을 이롭게 했다. 그 21세기 판본은 미국 자신의 부채를 세계의 소매 저축으로 떠받치는 유통망이다. 남을 빚지게 하던 구조가 미국의 빚을 소화하는 구조로 뒤집힌 것이다. 게다가 그 성장은 보장되지 않는다.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2026년 4월 약 3,210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3,000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 자국 부채를 소화할 새로운 수요망을 이토록 절박하게 모색하는 국가는 주도적인 설계자라기보다 위기에 몰린 채무자다.

셋째 동기인 온체인 주도권의 확보에도 모순이 발견된다. 자금세탁방지 레짐은 미국이 달러청산의 초크포인트와 FATF를 통해 주도해 온 사실상의 국제 공공재였는데, 미국이 육성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그 방어막의 가장 큰 누수 통로가 되고 있다. 체이널리시스의 『2026 크립토 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불법 주소가 수취한 크립토는 최소 1,54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62% 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그 가운데 84%가 스테이블코인이었다. 이 모순은 우선순위로 설명할 수 있다. 미국에게 범죄자금 차단은 실재하는 목표이되 최상위 목표는 아니며, 부채와 통화 지배력과 대중국 지정학에 밀린다. 이 선택이 절박함의 산물이라는 사실도 함께 드러난다. 자신이 세운 국제 공공재를 허물면서까지 지켜야 할 목표를 가진 국가는 질서를 시종일관 주도하는 설계자가 아니다.

3. 달러무기화의 역설

달러 질서의 가장 강력한 자산 가운데 하나는 금융제재 능력이다. 미국 재무부의 『2021 제재 검토』에 따르면 OFAC 제재 지정 대상은 2000년 912건에서 2021년 9,421건으로 933% 증가했고, 2022년에는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 약 3,000억 달러를 동결했다. 표 1의 첫째 차원인 동원 비율의 상승이 금융구조에서 가장 선명하게 관측되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 포스의 남발이 역설을 낳는다. 제재가 효과적일수록 제재 대상국과 제3국은 달러 레일에 대한 의존을 줄일 유인을 갖는다(McDowell 2023; Farrell and Newman 2019). 달러의 무기화가 탈달러 움직임을 가속한 것이다. 주목할 것은 이 탈달러를 주도하는 주체다. 그것은 개별 국가의 국가 엘리트들 — 외환보유고를 다변화하는 중앙은행, 대체 결제망을 구축하려는 정부 — 이다. 러시아 자산 동결 직후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이 3년 연속 연 1,000톤을 넘은 것, 러시아의 루블 연동 스테이블코인 A7A5가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933억 달러 이상의 제재 회피 거래를 매개한 것은, 동원된 포스가 상대의 방어적 류상스를 자극한 결과로 읽힌다. 스테이블코인이라는 형식조차 달러의 전유물이 아닌 것이다.

미국의 응수가 바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다. 흥미로운 것은 그 겨냥점이다. 미국은 탈달러를 주도하는 국가 엘리트를 설득하거나 제압하려 하기보다, 그들을 건너뛰어 개별 국가의 시민을 직접 상대하려 한다. 중앙은행이 보유고를 다변화하고 정부가 대체 레일을 깔아도, 그 나라 국민이 스마트폰 지갑 속에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쥐는 한 달러 질서의 저수지는 유지된다는 것이다. 이 ‘엘리트 우회, 시민 직접 상대’의 구도 자체는 스트레인지의 모형과 정확히 부합한다. 구조적 권력이 로컬 국가의 머리 위로 작동하여 시장과 개인에게로 내려가는, 앞 절에서 본 가시성 이동과 소매화의 논리가 여기서도 반복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여기서 스트레인지의 모형이 담지 못하는 것이 드러난다. 스트레인지의 구조적 권력은 본질적으로 정역학적이다. 그것은 달러 네트워크가 왜 강한지, 그리고 그 힘이 왜 시민 개개인에게까지 내려가는지는 설명하지만, 그 힘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행위가 그 힘 자체를 어떻게 마모시키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갖고 있지 않다. 반면 제재의 자기제한성 — 동원된 포스는 늘어도 순응

은 비례해 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네트워크 자체의 흡인력이 훼손되는 현상 — 은 정확히 아롱의 동역학에 속한다. 미국의 가장 강력한 퓨상스는 ‘달러망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기대, 곧 자발적 순응에서 나온다. 그런데 그 네트워크를 거둬 강제의 수단으로 동원하는 순간, 매력에 기반한 퓨상스는 강제에 기반한 포스로 전환된다. 그리고 포스는 퓨상스와 달리 쓸수록 소진된다. 아롱이 말한 포스의 남발이 퓨상스의 소진으로 귀결되는 바로 그 구조다.

스트레이니지는 달러 그림이 왜 여전히 강하며 어떻게 시민의 층위로까지 하강하는지를 설명하고, 아롱은 바로 그 그림이 왜 스스로 닳아가는지를 설명한다. 미국이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크립토 제도화로 서두르는 것은, 판을 주도하는 자의 여유에서가 아니라 지난 80년간 포스의 남발로 퓨상스를 소진해 온 자가 그림을 다시 쥐려는 궁지의 몸짓에 가깝다. 제재라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바로 그 무기를 지탱하던 네트워크의 흡인력을 갉아먹는다는 이 자기제한성이야말로, 패권 소진 테제가 구조적 권력 명제 위에 포개져야 하는 이유다.

4. 관대한 패권이 키운 구조 수정주의

스트레이니지의 1994년 결론은 비판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는 미국이 경제를 재건하면 “낙관주의의 부활과 함께 이상주의와 미래에 대한 비전도 부활할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유럽인, 일본인, 중국인, 아프리카인, 라틴아메리카인들은 이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고 썼다(Strange 1994; 국역본 391쪽). 구도는 분명하다. 세계질서의 향방은 미국의 의지에 달려 있고, 중국은 미국의 관대함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수혜자로만 등장한다. 중국이 질서의 규칙을 다시 쓰려는 주체가 될 가능성은 시야에 없었다. 이것은 개인적 부주의라기보다 이론의 귀결이다. 구조를 전 자는 미국이고 나머지는 선택지를 부여받는 자이며, 부여받는 자가 부여하는 자로 바뀌는 경로는 이론에 들어 있지 않다. 그런데 역사는 그가 내건 조건을 충족시켰다. 1990년대 후반 미국 경제는 재건되었고, 그 위에서 부활한 것은 정확히 그가 말한 이상주의였다. 클린턴 대통령은 2000년 3월 연설에서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이 “민주주의의 가장 소중한 가치 가운데 하나인 경제적 자유를 수입하기로” 동의하는 것이라 말했고,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젤리를 벽에 못 박으려는 것”에 비유했다(Clinton 2000). 같은 해 미 의회는 항구적 정상무역관계를 부여했고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했다. 관대한 패권은 실제로 작동했다.

그러나 결과는 협력적 질서가 아니었다. 중국의 세계 제조업 수출 비중은 1991년 2.3%에서 2013년 18.8%로 뛰었고(Autor, Dorn and Hanson 2016), 중국은 세계 제조업 부가가치의 약 30%를 차지하는 생산 대국이자 한때 1조 3,200억 달러의 미 국채를 전 채권국이 되었다. 그 힘은 남중국해의 군사화, 일대일로, 디지털 위안화, 희토류 수출통제의 형태로 미국 중심 질서의 규칙 자체를 겨냥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2017년 국가안보전략에서 중국을 ‘수정주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경쟁자를 국제제도에 편입시키면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 바뀔 것이라는 지난 20년의 전제가 대부분 틀렸다고 공식 인정했다(White House 2017). 중국의 부상이 그가 기대한 미국 이상주의의 산물이라면 관대한 패권은 자신의 도전자를 배양한 셈이고, 무관한 자생적 과정이었다면 세계의 희망이 미국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그의 구도가 틀린 것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스트레이니지의 비대칭이 서 있던 숨은 전제에 있다. 유로달러를 분석하던 시기의 주변부는 대체로 달러 채무자였고, 거품이 터지면 상환능력이 취약한 채무자가 직격탄을 맞았다. 반면 21세기에는 대규모 채권자 주변부가 등장했다. 중국은 1980년대의 멕시코가 아니다. 역외 달러를 빌리는 채무자가 아니라 세계에 상품을 팔아 달러를 벌고 그 달러로 미국의 채권을 전

채권자로 이 구조에 들어왔다. 채무자 주변부가 위기에 취약했다면, 채권자 주변부는 중심국을 취약하게 만든다. 불균형이 쌓이는 곳은 이제 주변부의 장부가 아니라 중심국의 재정이며, 그 채권을 사 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손은 주변부에 있다. 중국의 미 국채 보유는 2013년 11월 1조 3,200억 달러에서 2026년 6월 6,334억 달러로 절반 이하가 되었고, 해외 투자자의 보유 비중은 2008년 무렵 50% 안팎에서 30% 안팎으로 낮아졌으며, 2026년 8월 미국의 30년물 금리는 5.31%로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여기서 스트레인을 옹호하는 가장 강력한 반론이 그 자신의 저작에서 나온다. 1980년대 후반 일본은 세계 최대의 채권국이었고 많은 논자가 일본이 미국의 금융 패권을 대체하리라 예측했지만, 스트레인은 채권국 지위가 곧 구조적 권력으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보았고(Strange 1987) 역사는 그가 옳았음을 보여 주었다. 그렇다면 중국의 채권구매력도 같은 운명을 맞지 않겠는가. 본 논문은 그의 일본론이 사면체 논리 안에서 정확했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일본의 채권이 권력으로 전환되지 못한 이유는 금융구조 자체에 있지 않았다. 일본은 미국의 안보구조 안에 있었다. 미일동맹에 안보를 의존하는 국가가 채권을 무기로 미국을 흔드는 것은 스스로의 안보 기반을 흔드는 일이었다. 중국은 다르다. 중국은 미국의 안보구조 바깥에 서 있으며 오히려 그 구조의 주요 도전자이고, 봉쇄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채권자는 채권을 조정할 정치적 자유를 갖는다. 사면체가 네 구조의 상호 지지를 말한다면, 중국의 사례는 네 구조가 서로 분리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V. 공화국 없는 제국

1. 미국 내부정치라는 변수

관대한 패권의 비용은 미국의 특정한 지역과 계층에 집중되었다. 중국산 수입 경쟁의 증가는 1999~2011년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 약 56만 개를 직접 없앴고, 연관 산업과 지역경제를 포함하면 약 240만 개의 일자리 손실로 이어졌다(Autor, Dorn and Hanson 2016). 공장이 모여 있던 남동부와 중서부가 집중 타격을 받았고, 그 지역의 고용과 임금도 10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았다. 그리고 경제적 충격은 정치적 충격으로 번역되었다. 중국산 수입에 더 크게 노출된 선거구일수록 이념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공화당 강경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Autor, Dorn, Hanson and Majlesi 2020). 2016년 트럼프의 당선은 그 정점이었고, ‘미국 우선’은 세계질서를 떠받치는 역할 자체를 비용으로 재정의하는 민족주의였다. 그리고 이것은 한 정치인의 일탈로 끝나지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301조 관세를 유지했고 대중국 수출통제를 오히려 강화했으며, 2023년의 청문회와 2025년의 GENIUS법은 초당적이었다.

여기서 스트레인지의 1994년 문장으로 돌아가 보자. 그는 미국이 구조적 권력을 잘못 사용한 결과 그 오용이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납세자와 소비자(더 작은 범위로는 노동자)를 보호했다”고 썼다(국역본 382쪽). 이후 30년의 현실은 이 문장의 정확한 역전이었다. 값싼 중국산 수입품이 소비자에게는 이익을 주었지만 노동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버려졌다. 노동자는 팔호 속 ‘더 작은 범위’의 수혜자가 아니라 관대한 패권의 비용을 가장 집중적으로 떠안은 계층이었다.

그는 미국 권력을 영토가 아니라 소유와 통제로 측정해야 한다고 했다. 옳은 말이었다. 미국 기업은 중국의 공장을 소유하거나 지휘하고, 설계와 특허와 브랜드로 공급망 정상에 이윤을 흡수했다. 소유로 측정한 미국의 권력은 실제로 커졌다. 그러나 그 이윤은 주주와 본사의 장부에 쌓였고, 공장이 떠난 오하이오와 미시간의 노동자에게는 돌아가지 않았다. 문제는 민주적 정당성의 근원이 소유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권의 정당성은 영토에 묶여 있다. 표는 주주가 아니라 지역 주민이 던진다. 그가 ‘메이드 인 USA’의 착시라며 계산에서 뺀 영토는, 미국의 권력을 재는 척도에서는 빠질 수 있어도 그 권력의 발원지를 따지는 척도에서는 빠질 수 없다.

2. 초국적 제국

그가 1989년에 개념화한 ‘초국적 제국’은 영토 없이 구조로 지배하는 제국이었는데, 그 제국에는 시민도, 선거도, 동의도 없다(Strange 1989). 아롱이 퓨상스의 결정 요소로 꼽은 집단적 행동 능력, 곧 부담을 배분하고 그 배분을 시민에게 정당화하는 국내적 능력이 정확히 이 빈자리를 채운다. 아롱에게 미국은 제국이면서 동시에 공화국이며, 제국적 역할의 지속 가능성은 그 비용을 치르는 시민의 동의에 달려 있다. 물론 1998년에 세상을 떠난 학자에게 2016년의 사건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그가 산업 쇠퇴의 정치를 오래 연구했다는 사실도 기록되어야 한다. 이 반론은 VI자에서 다룬다. 본 논문이 묻는 것은 예측의 성패가 아니라 이론의 설계다. 분배 효과가 국내 정치로 되먹임되는 경로가 변수로 들어 있지 않다면 그 이론은 사후에조차 트럼프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며, 그의 범주로 읽으면 그것은 또 하나의 ‘오용’일 뿐이다. 그러나 대중국 관세와 수출통제는 두 정당의 행정부를 거치며 유지되었고 그것을 지지하는 유권자는 차이나 쇼크에 가장 크게 노출된 지역에 모여 있다. 정권과 정당이 바뀌어도 지속되는 ‘오용’은 더 이상 정책의 오류가 아니라 구조의 산출이다.

VI. 종합: 패권, 정역학과 동역학

1. 설득의 퓨상스에서 청구의 퓨상스로

아롱의 『제국적 공화국』은 미국을 스스로 원한 적 없던 제국적 의무를 떠맡은 공화국으로 그렸다. 폐허가 된 전후 세계에서 준비통화·안보 우산·최종 대부자를 제공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남지 않았고, 그 부과가 되돌릴 수 없는 결박이 된 계기는 한국전쟁이었다. 한국전쟁은 국방 예산을 세 배 이상으로 끌어올렸고 NATO를 상비군을 갖춘 통합사령부로 바꾸었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미국의 글로벌 개입은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 되었고, 글로벌 개입이 80년 지속되면서 미국의 퓨상스는 소진되었다. 이는 미국의 권력이 부드러운 설득에서 강압적인 포스로 변하는 과정을 통해 극적으로 드러낸다.

유럽결제동맹(EPU, 1950)과 INSTEX(2019)의 대비가 이 변화를 보여 주는 실험이다. 둘 다 달러를 우회하는 다자 청산 장치였다. EPU는 달러가 부족한 전후 유럽에서 역내 채권·채무를 상계했고, INSTEX는 대이란 제재를 우회해 유럽-이란 교역을 결제하려 했다. 구조는 닮았지만 결과는 극과 극이었다. EPU 기간 유럽 역내 무역은 1950년 약 100억 달러에서 1959년 약 230억 달러로 두 배 이상 늘었고, INSTEX는 사실상 단 한 건의 거래만 처리한 채 2023년 청산되었다. 차이는 설계가 아니라 미국의 태도에 있었다. 미국은 마셜플랜 자금 3억 5천만 달러를 EPU의 초기 자본으로 대며 유럽의 달러 우회를 용인했다. 소련에 맞설 통합 유럽이라는 더 큰 목적을 위해 단기 이익을 양보한 것이다. INSTEX는 미국의 명시적 반대 속에서 태어났고, 유럽 기업들은 2차 제재의 위협 앞에서 그것을 쓰지 않았다. 두 경우 모두 미국은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두 번째 경우 그 결과는 자발적 수용이 아니라 강제된 순응이었고, 그 대가로 유럽은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방어적 퓨상스의 담론을 키웠다.

같은 논리로 스트레인지가 1994년에 든 증거를 다시 읽을 수 있다. 그에게 달러 평가절하로 모든 보유자에게 비용을 부과한 것과 걸프전 전비를 동맹국에게 분담시킨 것은 구조적 권력의 증거였다. 아롱의 틀로 읽으면 결론은 반대가 된다. 설득과 공공재 제공으로 퓨상스를 얻던 중심국은 비용을 스스로 떠안는다. 비용을 남에게 청구해야 하는 중심국은 이미 청구의 퓨상스로 이동한 중심국이다. 1950년 미국은 EPU에 자기 돈을 댔고, 1991년 미국은 걸프전의 청구서를 동맹에게 보냈으며, 2025년 미국은 NATO에 GDP 5%를, 일본과 한국에 5,500억 달러와 3,500억 달러의 투자 약정을 요구했다.

2. 사면체: 네 개의 권력자원인가, 네 개의 유지비용인가

사면체를 그대로 적용해도 미국의 구조적 우위는 여전히 상당하다. 이 사실을 전제한 채, 각 기둥이 갈수록 설득으로 지탱되는지 아니면 현실적 포스의 동원으로 지탱되는지를 물어보자.

표 3. 사면체의 네 구조: 구조적 우위와 유지비용

구조	미국의 구조적 우위	현실적 포스의 동원	유지비용·취약성
금융	달러 준비금 57%, 외환거래 89%, 스테이블코인 약 99%	OFAC 제재 지정 912건(2000)→9,421건(2021), 러시아 준비금 약 3,000억 달러 동결	순이자 지출 1조 달러(2026), 중국 보유 국채 절반 이하로 감소
지식	첨단 반도체 설계·AI 모델·플랫폼 표준	2022년 10월 이후 대중국 수출통제의 연쇄 강화	중국의 자립 가속(2025년 딥시크)
안보	전 세계 동맹 네트워크와 해외 기지	NATO 2035년 GDP 5% 목표 관철(2025), 방위비 분담 압박	동맹의 전략적 자율성 담론, 사우디 등 우방의 헤징
생산	고부가가치 설계·지식재산권 장악	관세를 지렛대로 한 일본·한국의 대미 투자 약정(2025)	CHIPS법 527억 달러 지원, 희토류 가공의 중국 의존(약 90%)

금융구조에서 초크포인트를 쥐었다는 것은 강함의 증거이고, 그것을 점점 더 자주 눌러야 한다는 것은 소진의 증거다. 지식구조는 가장 강한 기둥이며 여기서는 스트레인지가 옳을 여지가 가장 크다. 그러나 미국이 이 우위를 수출통제로 동원하는 순간 무기화의 역설이 작동한다. 2025년 1월 중국 딥시크가 제한된 연산 자원으로 경쟁력 있는 모델을 공개한 것은 미국의 강압 때문에 오히려 기술적 자립이 앞당겨질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안보구조에서 NATO 회원국이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5%로 늘리기로 합의한 것은 미국의 퓨상스가 여전히 작동한다는 증거이지만, 그 결과를 얻기 위해 동맹 철수 가능성과 관세를 공개적 협상 카드로 꺼내야 했다는 사실은 행사 양식의 이동을 보여 준다.

네 기둥을 모두 대어 보면 하나의 그림이 나온다. 사면체는 실재하지만, 그것은 네 개의 권력자 원인 동시에 네 개의 유지비용이다. 각 기둥에서 미국의 위치는 여전히 정상이되, 그 정상은 갈수록 제재, 수출통제, 방위비 청구, 투자 약정 같은 현실적 포스의 동원으로 지탱된다. 부채와 재정적자 지표는 심층 권력의 반증이라 아니라 그 심층 권력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의 회계장부다. 여기서 제국적 부담론의 핵심이 드러난다. 공공재의 논리가 그러하듯 질서가 성공할수록 무임승차의 유인은 커지고 질서 제공자가 평화의 산출물로부터 얻는 상대적 몫은 줄어든다. 중심이 설계한 질서에 무임승차하는 방식으로 중심의 힘을 소진시킨다는 점에서 중국이 하나의 증거다. 수잔 스트레인지의 구조권력에서는 중국은 설명하기 어려운 이상현상이다. 패권의 도구가 어떻게 자신의 최대 도전자를 배양하는가. 그러나 부담론에게 중국은 예외가 아니라 예측이다. 성공의 비용은 밖으로는 도전자를, 안으로는 반란을 낳는다.

3. 두 이론의 종합

표 4. 스트레인지와 아롱의 분석 초점 비교

구분	스트레인지: 구조적 권력의 정역학	아롱: 패권 소진의 동역학
핵심 질문	권력은 어디에 있으며 선택을 어떻게 제약하는가	권력은 어떤 방식과 대가로 유지되는가
두 개념의 관계	동원 비율이 0에 수렴하는 극한의 퓨상스	매 상황마다 실현·결제되어야 하는 관계적 유량
시간 축	구조의 자기재생산(상대적으로 정태적)	동원 비율·전환 효율·행사 양식의 변화
미국의 곤경	정책 결정의 오류와 무책임(교정 가능)	제국적 역할의 구조적 부담(정책으로 해소 불가)
중국의 위상	관대한 패권의 수혜자	성공의 비용이 배양한 수정주의 도전자
국내정치	구조 운용의 마찰(정책으로 교정 가능)	구조가 낳는 되먹임(시민의 동의가 제국적 역할의 한계를 정함)

두 사람의 관계는 이렇게 요약된다. 스트레인지는 퓨상스가 가장 싸게 얻어지는 상태를 정밀하게 기술했고, 아롱은 그 가격이 오르는 과정을 개념화했다. 미국이 여전히 세계 최대 수준의 역량을 보유한다는 사실과 패권 유지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동시에 참일 수 있다.

4. 예상되는 반론

스트레인지는 미국 국내정치를 정말로 무시했는가. 그가 국내정치를 보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는 산업 쇠퇴의 정치를 20년 동안 썼다. 1979년 논문에서 그는 보호주의가 “깊이 뿌리내린 구조 변화에 대한 광범위한 저항”을 반영하며 “시장점유율을 둘러싼 기업 간 갈등은 따라서 정부 간 갈등으로 나타난다”고 적었다(Strange 1979). 1981년에는 투즈와 함께 『잉여설비의 국제정치』를 엮어 철강·섬유·조선·자동차—뒷날 러스트벨트가 될 바로 그 산업들—의 조정 정치를 다뤘고(Strange and Tooze 1981), 1985년 「보호주의와 세계정치」는 그 주제를 정면으로 잡았다(Strange 1985). 1987년 논문에서는 미국의 현정 구조 자체를 변수로 들었다. 미국은 정책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부적합하며 그 이유의 일부는 헌법 규정에 있어, 워싱턴은 “의회에 작용하거나 의회 안에서 작동하는 강력한 로비와 이익집단이 전략을 왜곡하거나 좌절시키거나 심지어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을 늘 의식해야 한다는 것이다(Strange 1987: 572). 의회도, 이익집단도, 사량산업도 그의 모형 안에 있었다. 더구나 그는 국내정치를 인과 변수로 쓸 줄 몰랐던 것도 아니다. 유로의 운명을 물을 때 그의 답은 “프랑스와 독일의 국내정치”였다(Kirshner 2000: 417 재인용). 그러므로 본 논문의 주장은 ‘그가 국내정치를 몰랐다’가 될 수 없다. 이 반론은 타당하다.

문제는 그가 국내정치를 놓은 자리다. 세 가지가 일관되게 나타난다. 첫째, 인과의 사슬이 정부에서 끝난다. 1979년의 정식을 다시 보라. 기업 간 갈등에서 정부 간 갈등으로. 노동자도, 유권자도, 정당 재편도 그 사슬에 없다. 그가 본 것은 산업의 정치였지 산업을 잃은 사람들의 정치가 아니었다. 둘째, 그는 그 저항을 보았고 그리고 기각했다. 1985년 논문의 판정은 보호주의가 심각한 위협이 아니며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국가적·기업적 자기이익의 이유들이 있다는 것이었다(Strange 1985). 이것은 관찰의 실패가 아니다. 셋째, 국내정치가 놓인 범주가 ‘마찰’이다. 1987년의 서술에서 의회와 로비는 구조적 권력의 동력이 아니라 그 권력의 일관된 행사를 방해하는 요인

으로 등장하며, 같은 논문이 쇠퇴론을 과거의 실패에 대한 편리한 변명이라 부르는 것도 같은 문법이다. 문제는 정책이고 정책은 고칠 수 있다. 1994년의 “아직도 과정을 되돌리기에는 늦지 않았다”가 그 문법의 결론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명제는 이렇게 정식화되어야 한다. 스트레인지의 이론에 국내정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국내정치가 구조적 권력의 산출물로서 들어 있지 않다. 그에게 국내의 저항은 구조에서 발생하는 마찰이지, 구조가 스스로 만들어 내어 끝내 구조 자신의 지속 가능성을 잠식하는 되먹임이 아니다. 마찰은 좋은 정책으로 줄일 수 있지만 되먹임은 그럴 수 없다. 같은 구분을 경로로 바꿔 말할 수도 있다. 그는 금융 경로의 정치적 귀결—투기와 위기가 낳는 반동—은 이론화했으나, 생산 경로—탈산업화가 철강·자동차 노동자를 만들고 그들이 고립주의 정치연합의 기반이 되는 경로—는 권력변화로 귀결시키지 않았다. 트럼프 현상은 두 경로의 합류이며, 그의 지도에는 한쪽 지류만 그려져 있다.

그가 세상을 떠난 1998년 시점에서 중국 충격은 아직 오지 않았으므로 중국의 부상을 보지 못한 것이 이론의 허점이라는 주장이 지나치다고 반박할 수 있다. 중국은 1991년 세계 제조업 수출의 2.3%였고(Autor, Dorn and Hanson 2016) 미국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0년 약 3%에 그쳤으며, WTO 가입과 항구적 정상무역관계는 모두 그의 사후다. 미국 제조업 고용은 1979년 6월 약 1,955만 명의 정점에서 1998년 6월 약 1,761만 명으로 10% 줄었을 뿐이고, 3분의 1이 사라지는 붕괴는 전적으로 1998년 이후에 일어났다. 1990년대의 논쟁 상대는 중국이 아니라 멕시코와 일본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트럼프 현상의 조짐을 놓치지 않을 수도 있었다. 바로 아버지 부시를 재선거에서 낙마시키고 아칸소의 무명 주지사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1992년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제3후보 로스 페로의 등장이다.

다만 당시 트럼프와 유사한 논리를 전개한 뷰캐넌의 1992년 선거운동이 지목한 것은 독일과 일본이었고 페로가 가리킨 것은 국경 남쪽, 멕시코였다. 1998년 이전에 중국발 제조업 충격은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반발의 정치적 크기는 이미 가시적이었다. 1992년 페로는 약 1,974만 표, 18.9%를 얻어 1912년 이후 최대의 제3후보 득표를 기록했고, 북미자유무역협정은 1993년 하원에서 234 대 200으로 통과했으나 민주당 의원 가운데 찬성은 102명뿐이었다. 그리고 같은 시기 로드릭은 세계화가 사회적 응집을 해쳐 정치적 반발을 부를 것이라 경고했다. (Rodrik 1997). 1997년의 경제학자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 1998년의 스트레인지에게 말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페로현상이 트럼프 현상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1992년 출구조사에서 페로의 지지는 서부 23%, 중서부 21%, 동부 18%, 남부 16%로 제조업 중서부에 특별히 쏠리지 않았고, 두 현상을 군 단위에서 연결한 실증 연구도 확인되지 않는다. 씨앗이 이미 뿌려져 있었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스트레인지가 살아 있는 동안 미국 정치에서 산업공동화, 즉 러스트벨트가 변수가 될 조짐이 뚜렷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본 논문의 한계.

첫째, 중국의 미 국채 보유 축소가 미국 장기금리에 미친 독립적 효과를 식별하는 것은 본 논문의 범위를 넘어선다. 본 논문은 인과효과의 크기가 아니라 환류 구조의 방향 변화를 논증했다. 둘째,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2026년 4월 정점 이후 정체되어 있으며 재무부가 기대하는 규모로 성장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VII. 결론

본 논문은 스트레이지의 구조적 권력론을 그 가장 강한 지점에서 출발해 재검토했다. 결론은 넷이다.

첫째, 스트레이지는 옳다. 그는 미국 쇠퇴론의 허약함을 누구보다 날카롭게 통찰했고 그 통찰은 2026년에도 유효하다. 달러 준비금 비중이 57%로 낮아지는 동안 규제도 의무도 없는 개인이 고르는 스테이블코인은 약 99%가 달러였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불가능 삼각형을 아래로부터 강제해 로컬 국가의 이자율 주권을 제약하고, 로컬 국가가 잃은 금융 가시성을 공개 원장과 미국 관할의 발행자를 매개로 워싱턴으로 옮긴다.

둘째, 그런데 바로 그 적중이 문제다. 스테이블코인의 재집중을 그 모형의 맹점으로 읽는 것은 오독이다. 그는 국가의 퇴각에서 미국은 예외이며 시장의 전진이 곧 미국의 강화라는 비대칭을 처음부터 이론의 중심에 두었고, 후기에도 “국가 일반은 덜 강력해졌지만 미국은 더 강력해졌다”는 판단을 유지했다(Strange 1998b). 로컬 국가가 통화주권을 털어 내는 동안 미국이 털어 내지 않는 오늘의 풍경은 반세기 전 모형의 교과서적 확증이다. 그러나 그 모형이 예측하는 관측은 판을 이끄는 주도적인 중심국의 세계와 자신이 주도하는 질서가 배태한 환경의 변화 때문에 궁지에 몰린 중심국의 세계에서 똑같이 나타나며, 모형에는 둘을 가르는 변수가 없다.

셋째, 그 적중이 곧 이론의 완전성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가 1994년에 관대한 패권의 수혜자로만 상정한 중국은 수정주의의 핵심이 되었다. 한때 1조 3,200억 달러의 미 국채를 쥔 채권자 주변부는 채무자 주변부를 전제한 그의 중심-주변부 비대칭을 뒤집었고, 그가 일본에서 확인한 채권의 무력함은 안보구조 바깥에 선 중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의 크립토 포용 역시 구조적 권력의 자동적 재생산이 아니라 대중국 견제를 축으로 한 방어적 응전이며, 순이자 지출 1조 달러의 재정과 불법 크립토의 84%가 스테이블코인으로 흐르는 자금세탁방지 레짐-미국이 류상스를 소진하면서 구축한 글로벌 공공재-의 누수라는 제약을 함께 떠안은 응전이다. 그리고 그 비용은 국내로도 청구되었다. 중국산 수입 경쟁은 약 240만 개의 일자리를 앗아갔고, 그 충격이 집중된 지역의 정치적 전환이 이상주의를 퇴장시켰다. 그의 이론은 패권국의 의지를 교정 가능한 외생 변수로 취급하고, 권력을 소유로 측정하면서 정당성이 영토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괄호에 넣는다. 그가 그런 미국은 공화국 없는 제국이었다.

넷째, 이 공백을 메우는 것이 아룡이다. 아룡에게 포스는 수단이고 류상스는 그 수단을 작동시켜 얻는 관계적 능력이며, 둘은 비례하지 않는다. 이 틀에서 구조적 권력은 류상스와 다른 종류의 권력이 아니라, 현실적 포스의 동원이 0에 수렴하면서도 타자의 선택이 중심국에 유리하게 정렬되는 극한이다. 구조적 권력이 잔액이라면 류상스는 거래마다 결제되는 유량이며, 소진이란 같은 지위를 유지하는 지점이 한쪽 극에서 다른 쪽 극, 즉 강제의 극 쪽으로 밀려가는 과정이다. OFAC 제재 지정의 933% 증가, 대중국 수출통제의 연쇄 강화, NATO 5% 목표와 동맹국 투자 약정은 네 구조 모두에서 이 세 차원이 관측됨을 보여 준다. 스트레이지는 동맹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능력(권력)을 보았고, 아룡은 청구해야만 하는 필요(절박함)를 보았다.

따라서 두 이론은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니다. 포스트-1945 국제질서는 ‘미국에 의한 질서’라는 명제와 ‘미국만을 위한 질서’라는 명제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 미국의 구조적 권력은 실재하지만 무비용의 권력이 아니며, 그 비용은 밖으로는 도전자를, 안으로는 반란을 낳는다. 크립토는 미국 패권의 새로운 도구인 동시에, 기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도구가 필요했음을 보여 주는 패권소진 과정을 증명하는 현상이다.

참고문헌

- Ahmed, Rashad, and Iñaki Aldasoro. 2026. "Stablecoins and Safe Asset Prices." BIS Working Papers No. 1270, rev. June 2026. Basel: BIS.
- Aldasoro, Iñaki, Paula Beltrán, and Federico Grinberg. 2026. "Stablecoin Flows and Spillovers to FX Markets." BIS Working Papers No. 1340 / IMF Working Paper No. 2026/056, March 27.
- Arabi, Kasper. 2026. "Susan Strange meets the everyday: The mundane sources of structural power."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52(2): 347–366.
- Aron, Raymond. 1962. *Paix et guerre entre les nations*. Paris: Calmann-Lévy. [영역: Peace and War: A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Doubleday, 1966.]
- Aron, Raymond. 1973. *République impériale: Les États-Unis dans le monde, 1945–1972*. Paris: Calmann-Lévy. [영역: The Imperial Republic: The United States and the World, 1945–1973.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74.]
- Autor, David H., David Dorn, and Gordon H. Hanson. 2016. "The China Shock: Learning from Labor-Market Adjustment to Large Changes in Trade." *Annual Review of Economics* 8: 205–240.
- Autor, David H., David Dorn, Gordon H. Hanson, and Kaveh Majlesi. 2020. "Importing Political Polarization? The Electoral Consequences of Rising Trade Exposure." *American Economic Review* 110(10): 3139–3183.
-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2022. "Tracing the Footprint of Cryptoisation in Emerging Market Economies." *BIS Quarterly Review*, March. Basel: BIS.
-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2025. "OTC Foreign Exchange Turnover in April 2025." *Triennial Central Bank Survey*. Basel: BIS.
-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2026a. "Stablecoins and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BIS Papers No. 170. Basel: BIS.
- Cengiz, Firat. 2025. "Stablecoins and Their Regulation: A Hayekian Approach."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28(2): 204–223.
- Chainalysis. 2026. *The 2026 Crypto Crime Report*. New York: Chainalysis.
- Clinton, William J. 2000. "Remarks at the Paul H. Nitze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of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March 8, 2000. *Public Papers of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States: William J. Clinton, 2000–2001, Book I*. Washington, DC: GPO.
- Cohen, Benjamin J. 1998. *The Geography of Mone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Congressional Budget Office. 2026.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26 to 2036*. Washington, DC: CBO.
- Eichengreen, Barry. 2011. *Exorbitant Privilege: The Rise and Fall of the Dollar and the Future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2025. "Strengthening American Leadership in Digital Financial Technology." Executive Order 14178, January 23, 2025. *Federal Register* 90: 8647.
- Farrell, Henry, and Abraham L. Newman. 2019. "Weaponized Interdependence: How Global Economic Networks Shape State Coercion." *International Security* 44(1): 42–79.
- Gilpin, Robert. 1981.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owan, Peter. 1999. *The Global Gamble: Washington's Faustian Bid for World Dominance*. London: Verso.
- Hofmann, Boris, Aaron Mehrotra, and Jan Paulick. 2026. "Dollarisation and Monetary Control: What Lessons for the Rise of Stablecoins?" BIS Working Papers No. 1370, July. Basel: BIS.
- Hudson, Michael. 1972. *Super Imperialism: The Economic Strategy of American Empire*.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26. "Currency Composition of Official Foreign Exchange Reserves (COFER), 2026Q1." *IMF Data Brief*. Washington, DC: IMF.

- Kennedy, Paul. 1987.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Economic Change and Military Conflict from 1500 to 2000*. New York: Random House.
- Kindleberger, Charles P. 1973. *The World in Depression, 1929–1939*.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irshner, Jonathan. 2000. “The Study of Money.” *World Politics* 52(3): 407–436.
- Klein, Michael W., and Jay C. Shambaugh. 2015. “Rounding the Corners of the Policy Trilemma: Sources of Monetary Policy Autonomy.” *American Economic Journal: Macroeconomics* 7(4): 33–66.
- Mastanduno, Michael. 2009. “System Maker and Privilege Taker: U.S. Power and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World Politics* 61(1): 121–154.
- McDowell, Daniel. 2023. *Bucking the Buck: US Financial Sanctions and the International Backlash against the Dolla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Norrlöf, Carla. 2010. *America's Global Advantage: US Hegemon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ye, Joseph S., Jr. 2004.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Affairs.
- Obstfeld, Maurice, Jonathan D. Ostry, and Mahvash S. Qureshi. 2019. “A Tie That Binds: Revisiting the Trilemma in Emerging Market Economi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101(2): 279–293.
- Panitch, Leo, and Sam Gindin. 2012. *The Making of Global Capitalism: The Political Economy of American Empire*. London: Verso.
- Rey, Hélène. 2013. “Dilemma not Trilemma: The Global Financial Cycle and Monetary Policy Independence.” In *Global Dimensions of Unconventional Monetary Policy*, Proceedings of the 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 Economic Policy Symposium, Jackson Hole, 285–333.
- Rodrik, Dani. 1997. *Has Globalization Gone Too Far?*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Schnabel, Isabel. 2026. “From Money Market Funds to Stablecoins: Lessons for Central Banks.” Bank of Korea International Conference, Seoul, June 1. Frankfurt: European Central Bank.
- Strange, Susan, and Roger Tooze, eds. 1981.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Surplus Capacity: Competition for Market Shares in the World Recession*. London: George Allen & Unwin.
- Strange, Susan. 1971. “The Politics of International Currencies.” *World Politics* 23(2): 215–231.
- Strange, Susan. 1979. “The Management of Surplus Capacity: or How Does Theory Stand Up to Protectionism 1970s Style?” *International Organization* 33(3): 303–334.
- Strange, Susan. 1985. “Protectionism and World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39(2): 233–259.
- Strange, Susan. 1986. *Casino Capitalism*. Oxford: Basil Blackwell.
- Strange, Susan. 1987. “The Persistent Myth of Lost Hegemony.” *International Organization* 41(4): 551–574.
- Strange, Susan. 1988. *States and Markets*. London: Pinter.
- Strange, Susan. 1989. “Toward a Theory of Transnational Empire.” In *Global Changes and Theoretical Challenges*, eds. Ernst-Otto Czempiel and James N. Rosenau. Lexington: Lexington Books.
- Strange, Susan. 1994. *States and Markets*. 2nd ed. London: Pinter. [국역: 『국가와 시장』. 본문의 쪽수 표기는 국역본 기준.]
- Strange, Susan. 1995. “The Limits of Politics.” Lecture delivered at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Transcript published on the LSE History blog, March 19, 2025.
- Strange, Susan. 1996. *The Retreat of the State: The Diffusion of Power in the World 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국역: 『국가의 퇴각』. 양오석 옮김. 서울: 푸른길, 2001. 본문의 쪽수 표기는 국역본 기준.]
- Strange, Susan. 1998a. *Mad Money: When Markets Outgrow Government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Strange, Susan. 1998b. “What Theory? The Theory in Mad Money.” CSGR Working Paper No. 18/98. Coventry: University of Warwick.

- Strange, Susan. 1999. "The Westfailure System."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25(3): 345–354.
- Triffin, Robert. 1960. *Gold and the Dollar Crisis: The Future of Convertibilit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2021. *The Treasury 2021 Sanctions Review*. Washington, DC.
- U.S.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ittee on Financial Services, Subcommittee on National Security, Illicit Finance, and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2023. *Dollar Dominance: Preserving the U.S. Dollar's Status as the Global Reserve Currency*. Hearing, June 7, 2023. Serial No. 118-29.
- White House. 2017.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hington, DC: The White House.
- World Gold Council. 2026. *Gold Demand Trends: Full Year 2025*. London: World Gold Council.